

나주 혁신도시 토지보상 왜 늦어지나

“지장물 조사부터” VS “현재 시가 보상을”

나주혁신도시사업단이 나주 급전·산포면 혁신도시 예정지구 보상을 위해 추진중인 지장물 조사가 편입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는 등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보상절차가 왜, 무엇 때문에, 얼마나 지연되고 있고, 혁신도시 조성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언제쯤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조명해 본다.

▷양측 입장= 9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광주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이 지장물조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20여 일째 조사를 벌이지 못하고 있다.

사업단 주민반대로 전담팀 20여일 조사 못해

주민들 양도세 소급 등 5개항 요구하며 반발

토공 등 사업단은 지난달 23일에도 급전·산포면 일대에 조사팀을 파견했으나 주민대척위원회의 거센 항의로 인해 지장물조사를 포기하고 돌아왔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주택과 수목 등 주요 지장물조사를 뒤로 미룬 채 분묘 조사를 나서 현재까지 50%가량만 조사를 마치는 등 보상 일정 추진에 적잖은 차질을 빚고 있다. 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 작업도 당초 5월에서 오는 7월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현재 주민들은 실보상이 책정, 축산

폐업보상, 양도세 인하 등 4개의 요구 조건을 지난달 15일에 나주시와 사업단측에 제출한 뒤 지장물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보상이 현실화 관철될 때까지 정부측에 현실하는 한편 양도세 과세기준을 살려라가 아닌 기준시가대로 소급적용해달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김춘식 나주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장은 “최근 주민들은 당초 41개의 요구사항 가운데 실보상이 책정 등 5개만을 우선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단측

이 원론적인 답변만을 거듭하고 있다”며 “일단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되면 주민들의 권익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단측과 우선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단측은 실보상이 책정이 아닌 지장물조사 단계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에 대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토지 및 지장물조사를 마쳐야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책정이 이뤄지는 만큼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진일정 조정 및 향후 전망= 사업단측은 지장물조사가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6월중 감정평가작업, 7월 이후 보상 착수 등 향후 보상관련 일정 자체를 조정해야 하는 만큼 주민들과의 접촉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대책위 5대 요구사항

- 토지·지장물 현시가 보상
- 이주로 인한 축산폐업 보상
- 양도세 과세 소급적용
- 보상후 이주대책 마련
- 나주배 브랜드 가치 인정

특히 사업단측은 오는 11일 나주시청에서 열리는 나주혁신도시보상협의회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상협의회는 나주시 부시장, 시행사 단장, 편입주민, 학계 인사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보상작업 지연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질지는 의문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 작업은 공인된 평가기관에서 진행되는 만큼 보상이 책정으로 인한 주민불만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들과의 협의만 이끌어낸다면 토지나 가족에 대한 보상작업을 순차적으로 벌일 수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임대주택 사업자·사원용 주택

종부세 면제 요건 확대

임대주택 사업자와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요건이 개선되고 내년부터 종부세의 과세 방식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과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종부세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의 이사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일시적 공가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는 5년, 매입임대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사업을 수행하면 종부세가 면제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해 6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에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임대주택 소유자가 의무 임대기간(5년) 중에 임대주택 법령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뒤 세입자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도 5년 동안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해 종부세 추징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상으로 임대하면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사원용 주택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종업원들로부터 일부 보증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종부세 면제 요건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로 개선하기로 했다.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 종부세 면제 주택 소유자가 매년 면제 주택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절차도 한번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신고하도록 고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에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바뀔에 따라 고지서와 세액 산출명세서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번호이동 하루에 8만7,363명

이동시장 이상과열 경쟁

최근 이동통신시장의 하루 번호이동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이동통신이 비정상적인 과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시장 팽창전이 격화되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감시 역할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뒷북 행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루 번호이동 수가 사상 최대 규모인 8만7천363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30일에 기록했던 하루 6만2천535명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2004년 번호이동제가 도입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이 같은 이동통신시장의 과열 상황은 그간 충분히 예견돼 왔다. 지난 3월부터 과열되기 시작한 이동통신시장의 과열 조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이달 들어 하루평균 번호이동 규모가 2월에 비해 2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루 평균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2월엔 2만2천594명이었다. 3월 들어서는 3만977명으로 늘었다가 4월엔 하루 평균 2만8천872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5월1일부터 7일 사이에 4만7천666명으로 강증 뛰었다. 5월 들어 일별 번호이동을 보면, 1일 2만3천586명, 2일 2만9천33명, 3일 3만8천736명을 기록하다 4일에는 50% 이상 증가한 5만6천349명에 달했다.

5일과 6일에는 각각 4만8천926명, 4만9천672명으로 더 늘어난 뒤 7일엔 무려 8만7천363명을 기록했다.

이상적으로 주말의 경우 번호이동이 2만명을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5일(토)과 6일(일)은 예전에 비해 2배 이상이 넘는 5만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번호이동을 한 것을 보면 시장 과열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연봉 평균 7.1% 올랐다

올해 연봉협상을 마친 직장인 중 절반 가량은 연봉이 인상됐으며 이들의 평균 연봉 인상은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와 직장인 포털 비즈몬(www.bizmon.com)은 올해 연봉협상을 마친 직장인 655명을 상대로 ‘2007 연봉 인상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56.5%가 ‘작년보다 연봉이 올랐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작년 연봉에서 동결됐다’는 응답자는 42.0%였고, ‘작년 연봉에서 삭감됐다’는 응답은 1.5%였다. 올해 연봉이 올랐다는 응답자들의 평균 연봉 인상은 7.1%로 집계됐다.

연봉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51.0%), ‘아주 불만족스럽다’(18.6%) 등 전체 응답자의 69.6%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이밖에 ‘대체로 만족한다’(28.1%), ‘아주 만족한다’(2.3%) 등으로 조사됐다.

연봉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들은 ‘불만족스럽더라도 수긍한다’(52.0%), ‘이직·퇴사를 준비한다’(30.9%), ‘회사와 재협상을 시도한다’(17.1%)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산타로사' 노트북PC 출시 삼성전자가 9일 인텔의 새로운 플랫폼인 '산타로사'를 탑재한 노트북PC 6종을 출시한 가운데 모델들이 신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밀수 중국산 웅담·사향 모두 가짜

인천공항세관, 올 밀반입 499개 성분 분석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중국산 웅담과 사향, 우황(牛黃)은 모두 가짜인 것으로 판명됐다.

9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되려던 중국산 사향과 웅담, 우황 499개를 적발하고 이를 관세중앙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모두 주성분이 없는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향은 옛날부터 생약으로서 감시과 진경제(鎭驚劑)로, 또 기질했을 때 정신이 들게 하는 약으로 내복됐으며 웅담은 담준분비촉진제와 흥분제, 진경진통제(鎭痙鎭痛劑)로서 급성질환, 소아병에 쓰인다.

우황의 경우 맛은 약간 쓰고 성분은 콜릭산과 빌리루빈, 에르고스테롤, 비타민D 등이며 한방에서는 해열제와 해독제, 진정제, 진통제, 감시제로 쓰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여행자 김모(55·여)씨가 중국에서 밀반입하려던 생사향 21개는 중국돈 3천200위안(한화 40만원)에 구입했지만 분석결과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최재호 휴대품과장은 “이들 사향이나 웅담, 우황은 대부분 열풍유기에 처한 야생동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대상인 품목으로 대부분 통관이 되지 않고 폐기 처분돼야 할 대상”이라며 “따라서 해외에서 이런 물품을 사면 괜히 외화만 낭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일부 의약품류 판매업체나 여행사 현지 안내원들은 ‘본인이 복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약품은 휴대품으로 반입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CITES관련 의약품이나 약효와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류는 국내에 절대 반입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해외여행자가 인천공항을 통해 의약품류를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1만5천293건(74만5천942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에 대응, 쇠고기 등 축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 이르면 이달말께 가시적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9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검역과학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농림부·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검역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고위 관계자들은 청와대에서 윤대희 경제수석에게 주재하는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회의를 열어 축산물 유통 혁신 방안을

운전자들 새 차 고를때

“성능·파워보고 산다”

운전자들은 새 차를 고를때 성능과 파워를 가격보다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하니엘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모터쇼 기간 관람객 3천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4%(1천224명)가 ‘새 차 구입시 파워와 성능을 가장 크게 고려한다’고 답했다.

유지비용이라는 답변은 34.5%이었으며 차량 가격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14.6%에 불과했다.

디젤차를 몰아 본 경험자 1천834명 가운데 75%는 디젤차를 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쇠고기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부, 한미 FTA 대응

이달말께 대책 마련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에 대응, 쇠고기 등 축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 이르면 이달말께 가시적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9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검역과학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농림부·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검역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고위 관계자들은 청와대에서 윤대희 경제수석에게 주재하는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회의를 열어 축산물 유통 혁신 방안을

56.5%가 ‘작년보다 연봉이 올랐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작년 연봉에서 동결됐다’는 응답자는 42.0%였고, ‘작년 연봉에서 삭감됐다’는 응답은 1.5%였다. 올해 연봉이 올랐다는 응답자들의 평균 연봉 인상은 7.1%로 집계됐다.

연봉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51.0%), ‘아주 불만족스럽다’(18.6%) 등 전체 응답자의 69.6%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이밖에 ‘대체로 만족한다’(28.1%), ‘아주 만족한다’(2.3%) 등으로 조사됐다.

연봉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들은 ‘불만족스럽더라도 수긍한다’(52.0%), ‘이직·퇴사를 준비한다’(30.9%), ‘회사와 재협상을 시도한다’(17.1%)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삼폐인’ ‘꼬낙’ 명칭 못쓰게 되나

EU, FTA협상서 지리적 표시제 보호 주장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종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반명 사처럼 통용돼온 삼폐인·꼬낙·스카치(위스키)·보르도(와인) 등의 명칭을 더 이상 합부로 국내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9일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따르면 최근 동향으로 미뤄 EU는 향후 FTA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지리적표시제(GI) 보호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적표시제란 농·특산물 특정지역의 기후와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지명·상표를 연계시켜 등록한 뒤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FTA의 상대인 EU가 세계적으로 지리적표시에 관한 한 가장 선도적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현재 EU에는 약 700여 가지의 지리적 표시가 등록돼 있다.

탄산이 들어간 스파클링 와인을

총칭하는 뜻으로 흔히 사용되는 ‘삼폐인’은 정확히 말하면 프랑스 상파뉴 지방산 스파클링 와인의 고유 명칭이다.

꼬낙도 주종(酒種)인 브랜드와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프랑스의 코나크 지방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원료로 만든 브랜드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스카치 위스키도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보리·밀·수수 등을 발효시킨 뒤 증류해서 만든 술이다.

EU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WTO는 지금까지 대체로 EU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아직까지는 EU가 구체적으로 지리적표시제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WTO 등에서 EU가 지리적 표시제를 매우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반드시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4월 현재 총 27개 농산물과 11개 임산물에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돼 있다.

연합뉴스

시중銀 연체율 일제히 오름세

건전성 악화 경계경보

중소 대출 쏠림 우려도

올 1·4분기를 기점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의 연체율이 오름세로 전환됐다. 특히 최근 급증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중기대출에서 활로를 뚫으면서 쏠림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연체율(연체율 산정 기준 적용)이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하나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0.76%에서 올 1분기 1.03%로 다시 1%선으로 후퇴했다.

국민·신한·우리은행 등이 연체율을 1% 아래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는 어느 은행에도 밀리지 않는 하나은행이 뒤처지는 이변을 연출했다.

하나은행의 1분기 연체율 상승폭은 0.27%포인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0.

■시중은행 연체율 추이 (단위:%)

구분	06년3분기	06년4분기	07년1분기
국민은행	1.28	0.95	0.95
우리은행	1.14	0.96	0.97
신한은행	1.02	0.65	0.79
하나은행	0.80	0.76	1.03

01%포인트와 큰 차이를 보였다. 기업대출은 0.87%에서 1.18%로, 가계대출도 0.57%에서 0.76%로 악화됐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총 자산은 20% 가량 늘리는 등 외형확대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기업은행의 기업 부문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51%에서 0.89%로 0.38%포인트 급증했다.

가계대출연체율도 0.18%에서 0.29%로 0.11%포인트 올라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총자산율 약 20% 늘린 바 있다.

지난해 대출을 크게 확대하지 않은 은행들의 경우 연체율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국민은행의 1분기 연체율은 0.95%로 직전분기인 2006년 12월말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0.98%에서 0.06%포인트 오른 1.04%, 가계자금 연체율은 0.92%에서 0.95%로 상승했다.

연합뉴스